

# 인도-파키스탄, 미사일 공격...6년 만에 군사충돌

인도, 분쟁지역 폭격...“8명 사망”  
파키스탄 보복...“전투기 5대 격추”  
유엔,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 촉구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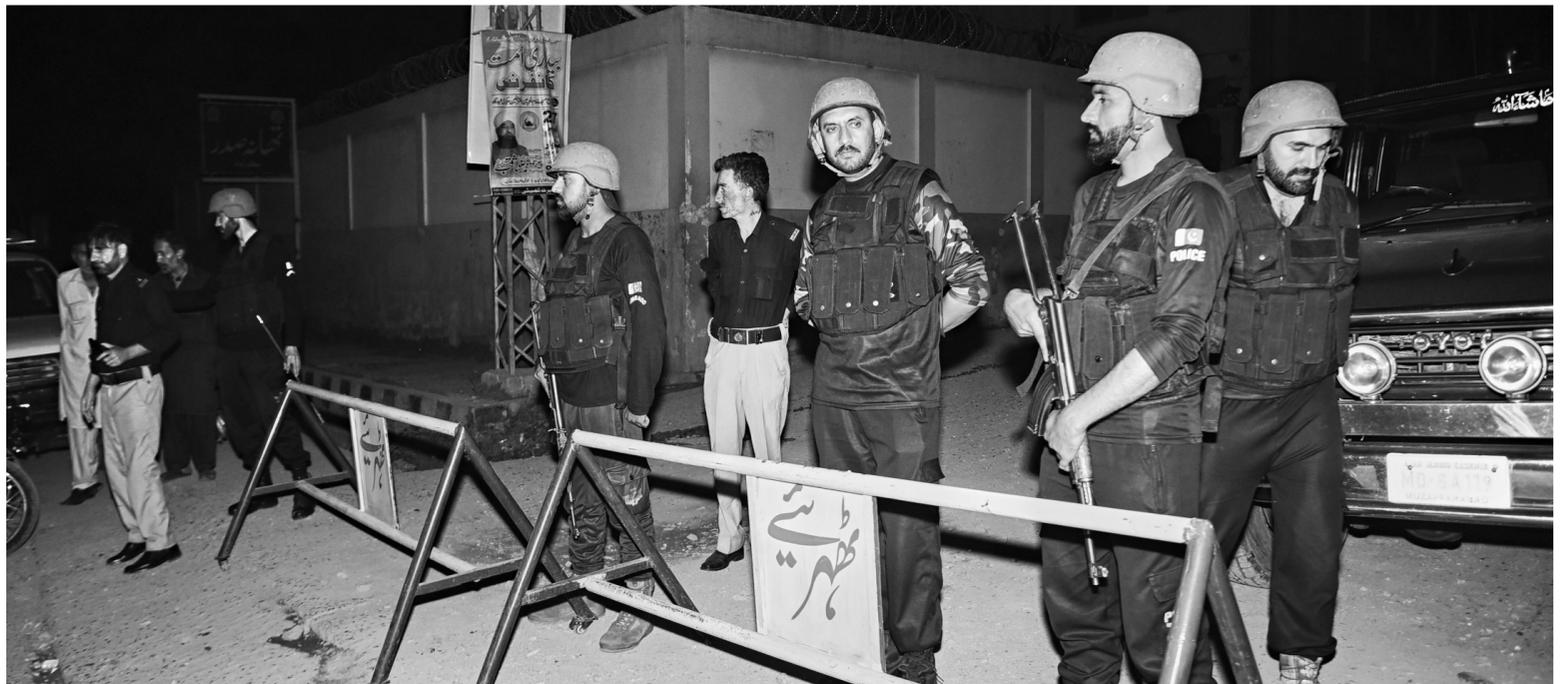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사마TV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군이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으며 의료진과 구조대원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



7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 경찰들이 인도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은 국민이 파키스탄군을 지지하며, 파키스탄 국민 전체의 사기와 정신은 매우 높다”며 “파키스탄 국민과 파키스탄 군은 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이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태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난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 테러로 경찰 40여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다.

인도는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탈람 인근에서 관공격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다.

이후 LoC 인근에서 전날까지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다. 특히 인도는 전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터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연합뉴스

## 한국 ‘삶의 질’ 세계 20위...한 계단 하락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 보고서  
1.2위는 아이슬란드·노르웨이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UNDP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3년 기준 0.937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20위로 평가됐다

전년도(0.928·19위)보다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순위는 내려간 것이다.

한국의 HDI는 1990년까지만 해도 0.738로 평가됐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 2010년과 2012년 1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HDI는 국가별로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한국의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4.33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62년과

12.72년이었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만9,726달러로 평가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기간 삶의 질이 크게 퇴보해 작년 보고서에서는 한국보다 세 계단 낮은 20위에 머물렀던 미국은 올해 평가에선 17위(0.938)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다만, 미국의 기대수명은 79.30년으로 선진국 가운데선 여전히 짧은 편이었으며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5.92년과 13.91년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1인당 GNI는 7만 3,650달러로 훨씬 컸다.

HDI 순위 1위는 아이슬란드였다. 2023년 기준 인간개발지수 0.972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의 기대수명은 한국보다 1.64년 짧았지만,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2.23년과 1.19년이 더 길고 1인당 국민소득은 6만9,117달러로 집계됐다. 아이슬란드에 이어서는 노르웨이(0.970), 스위스(0.970), 덴마크(0.962), 독일(0.959), 스웨덴(0.959), 호주(0.958), 홍콩(0.955), 네덜란드(0.955), 벨기에(0.951) 등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미 하원의원 ‘한국의 미 플랫폼기업 차별 제지 법안’ 재발의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6일(현지시간)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전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해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법정보시스템에는 한국에 특정 제약을 가할 적절한 행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돼 있다.

이번 법안은 밀러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법안

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밀러 의원이 작년 9월에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이내에 그 영향과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무부 장관에게 보고 내용을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 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장관 “가자 완전파괴...인종청소급 재점령”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 대한 재점령 계획을 밝힌 이스라엘 내각에서 인종청소를 방불케 하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더는 휴전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극우 강경파로 분류되는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가자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하마스나 테러가 없는 남쪽의 인도주의 지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그곳에서 상당수가 제3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파괴와 주민의 강제이주 계획은 최소한 전쟁범죄 정황이며 인류 최악의 범죄인 제노사이드(genocide·특정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연합뉴스

단 말살)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 노팅엄대 국제법 교수인 빅터 카탄은 가디언에 “스모트리히 장관은 오랫동안 유사한

언동을 해 왔지만, 이번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병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는 맥락 속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45% 관세’ 중국산 실은 화물선 미국 입항...절반 ‘뚝’

7,800억 화물에 5,800억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의 적용을 받는 중국산 상품을 실은 선박들이 미국 서부 해안의 주요 수출입 관문인 항구에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입항 선박이 절반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항(LA항)의 진 세로카 전무는 6일(현지시간) CNN에 “(입항 화물선 이) 이번 주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35% 감소했다. 이번 들어오는 화물선은 지난달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부과된 관세가 처음으로 적용된 화물선”이라고 말했다.

이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 화물선 80척 가운데 20%는 취소됐고, 6월에 도착 예정이던

13척도 이미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물류·화물운송 중개업체 플래스포트의 라이언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미국 소매업체는 관세보다 보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품을 수입하는 대신 중국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입업체와 소매업체가 관세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가운데 컨테이너 배송이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컨테이너가 60% 감소한다는 것은 도착하는 물건이 60%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이 몇 주 더 지속되면 (미국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소진하고 여름이 되면 재고가 부족해지고 선박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LA항의 세로카 전무는 진열대가 텅 비

지는 않겠지만 “만일 당신이 특정 유형의 바지를 찾는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유형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하역을 시작한 바이올렛 호에 실린 약 5억6,400만달러(약 7,850억원) 어치의 화물 가운데 약 40%가 145% 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이들 화물을 수입한 업체들이 부담할 관세가 최소 4억1,700만달러(약 5,800억원)라고 추산했다.

바이올렛 호에 실린 화물은 생선, 운동화, 기계차, 라텍스 의료용 장갑, 자동차 앞유리, 파스타, 휠체어, 브라지어 등 소비재와 산업용품들이다.

연합뉴스